

관세음보살은 계시는가

부산 불교계, 한진중공업 원만한 해결 기원 법회

한진중공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산 불자들이 마음을 보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하재훈)는 8월 10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 인근에서 '한진중공업 문제해결과 김진숙 무사귀환을 위한 생명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불교계가 한진중공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하는 생명평화 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 행사로는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의 성명서 발표와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노동부 등 기관 방문에 이은 것이다. 행사에는 대불청 회원을 비롯해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대구 무신사 주지 범우 스님 등 지역불자들이 참가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님과 김진숙 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이 자리에 서있다"며 "중생의 믿음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화답한다는 관세음보살님은 과연 계시는가. 관세음보살을 대신해야할 우리 불교인들 또한 귀가 멀어 목목부답인 것인가 자문하며 절망하고 있

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진보와 보수, 경영자와 노동자, 정치인에 대해 잘 모른다. 아는 것은 단 하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생명을 가진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이라며 "도반들과 지극하고 정직하게, 만나고 대화해 함께 웃을 수 있는 해답을 찾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우식 대불청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생명체는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행복"이라며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하재훈 대불청 부산지구회장은 '한진중공업사태 해결을 위한 생명

평화 발원문'을 통해 "불자들이 갈등해소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함에도 외면하며 살아온 죄를 진실로 참회한다"며 "가녀린 여인의 품으로 동료들의 생업을 위해 200일 넘게 높은 고공에서 온몸 불사하며 소신공양 올리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위해 자비의 실천자가 되어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꼭 지켜낼 것"을 발원했다.

이에 앞선 9일 부산지역 종교계 지도자들도 한진중공업을 찾아 원만한 해결을 기원했다. 이날 방문에는 범어사 주지 범여 스님, 태종사 회주 도성 스님, 부산종교인평화회 대표 정각 스님, 정영문 원로 목사 등이 참가했다.

조동섭 · 박지원 기자

동국대 전산원 교외 이전

일산캠퍼스 신축비용 승인을 위해 기획됐다.

이사회도 모르고 진행돼 논란을 빚었던 동국대 전산원 문제가 교외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는 8월 10일 제264회차 이사회의를 열고, 전산원 이전을 위한 1000여 평 규모 65억원 상당의 부지 매입을 승인했다. 또, 이전 후에도 기존 학과 중심으로 운영키로 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전환 계획은 백지화됐다.

전산원 사업전환 계획은 오영교 前 총장 당시 전산원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외부업체와 허위계약서에 날인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이사회에서는 동국대 경주병원에 추진 중인 국제 양한방 의료관광 및 힐링센터 건립을 승인했다. 일산 생명과학대학 강의동 및 약학대 건립 공사비 지급을 위한 기제도 승인했다.

힐링센터는 양한방 종합검진, 메디컬 스킨케어 위주의 의료관광 사업과 통합기능의학, 힐링체험 등을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진료영역 확대를 통한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이사회의 결의로 힐링센터는 국고 40억원(경북도 20억원, 경주시 20억원)에 자부담 30억원을 투입해 경주병원 부지 안에 연면적 4544㎡,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내년 말경 들어서게 된다.

이사회는 임기만료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법안위원 3인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 스님과 종회위원 일문 · 학담 스님을 추천키로 결의했다.

개방이사추천위는 법안추천 이사 3명 외에 대학평의회 2명(김동진 의장, 박명희 교수), 산하학교 2명(오택원 동대부고 교장, 김용진 동대부고 교장)으로 구성돼 있다. 합병을 위한 최종 법적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영석학원과의 문제는 이사장에게 일임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동국대 일산캠퍼스 강의동과 약학대 신축에 따른 145억원의 기채 승인을도 결정했다. 추후 바이오관 설립을 위한 270억원까지 포함되면 동국대의 금융비용은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희옥 총장은 "등록금만으로 학교시설을 갖추던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조동섭 · 이너는 기자



동국대 이사회는 8월 10일 제264회차 회의서 전산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자승 스님, 9월 프랑스 간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

국불교와 사찰음식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를 찾는다.

조계종 총무원은 "9월 27일~10월 3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총무원장스님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불교의 국제구호 등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찰음식 시연회와 템플스테이 홍보 등도 계획됐다.

이 외에도 조계종 대표단은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불교 문화체험 행사와 유네스코 본부 방문, 때제 수행공동체 방문, 파리7대학 한국학과 방문, 파리 교민·불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자승 스님은 지난해에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미주지역을 순방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49재 비용 지불 과연 옳은 것일까

‘염불보다 잣밥’이라는 속담이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건성으로 하고 잇속에만 마음을 둔다는 말이다.

일부 불자들은 스님들이 불자들의 고민과 상담을 들어주는 것보다 49재, 천도제에만 열을 올린다고 불만을 성토했기도 한다.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49재 비용 지불'이 과연 옳은지를 두고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김 씨는 "종단 규정에 '49재수입'이라 해서 수입회계가 잡혀있다. 자발적인 보시라기보다 용역사업의 댓가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의 과민반응일까"라며 "수행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경제행위는 공동체 다뤄야 한다. 자발적인 보시의 시스템화, 인생의 통과이레(생로병사)에 대한 기도에서 비자발적인 강제적인 보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씨는 김 씨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가격을 정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잃은 것"이라며 "보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이다. 개인 경제능력에 따라 보시하고 신도가 돈 낼 형편이 안 돼도 무료로 기도에 동참시켜 제사를 올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승보살도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출가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 씨는 "이러한 문제는 사부대중 모두와 인연된 역사와 문화의 흐름에서 봐야지 욕심 많은 사찰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수준이하의 문제제기"라고 지적했다.

금액을 정해 보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는 주장도 나왔다. K씨는 "선진화된 시스템 혹은 신행활동을 위해 초하루, 보름, 제사 등에서 월요일, 휴일 가족들의 참여 보장 등으로 나눠 일상적인 정액 보시(마치 교회헌금식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 지불보다 수입의 사용처를 따져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스님은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절에서 지내는 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齎)라는 의미는 첫째, 청정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둘째, 널리 베풀어 공덕을 짓는다는 뜻이다"라며 "꼭 짚어야 한다면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베풀고 복지에 베푸는 식으로 회향 부분에서 짚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49재를 어떻게 하면 포교의 장으로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며 "불교의식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굳이 공짜로 그리고 재지는 일이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문제를 삼으려면 그 재화의 사용처를 따지는 것이 옳다"고 반문했다.

이너는 기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8월 10~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분단66년, 복덕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북한 전통사찰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은 10일 개막식 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박주선 의원,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이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의 안내로 사진전을 둘러보는 모습.

10·27법난 피해 신청 종단도 가능

국방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중 불교를 지칭하는 '불교계 등 관련분야'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은 조계종이 종립성 논란을 의식해 국방부에 삭제를 요청한 사안이다.

개정안은 피해종교단체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님들의 경우 출가 후 가족과 단

절대 유족이 피해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피해종교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사 치유와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명예회복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신체(정신)장애 진단서' 대신 '진단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의료지원금 산정시 상이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보상을 하지 않고, 검진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재심신청시 신체

(정신)장애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또 구비서류를 '진단서'로 정리함에 따라 이해 당사자에게 시행령의 취지를 쉽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런 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이 10·27법난을 겪은 스님들과 종단의 명예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하고 있다.

총무원 사회부 공송관 팀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종단과 스님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께 드리는 글

한국불교를 비롯한 태고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동방대학원대학교와 관련하여 인공스님께서 경찰청에 접수한 진정서와 그에 따른 성명서 발표 및 신문기사를 보면서 종단과 학교에 대한 총무원장님의 남다른 애정에 감사드리며, 무한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학교가 더욱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무원장스님의 오해, 또는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① 학교법인 동방대학교는 태고종에서 100% 출연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법인 동방대학교는 태고종이 100% 출연한 학교법인이 아니며, 전체 설립자금 약100억원 중, 학교법인 설립자가 80%를 출연하였고, 태고종에서 2003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약 20여 억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태고종과 약정체결한 시점인 2002. 12. 7. 7개항에 관한 약정을 한후 2003년부터 분납하였습니다.
- ② 약정서 7개항 중, 제5항의 불이행으로 제7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를 범하였습니다. 약정서 제5항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경영하던 종립 동방불교대학은 이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학교법인 동방대학교에 귀속시키고 법인의 부설기관으로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태고종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태고종이 동방불교대학을 종립대학으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종단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학교 법인 측에서는 약조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였고, 정관이 정하는 바대로 성실히 학교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 ③ 학교법인 동방대학교가 유지경영하는 동방대학원대학교는 태고종 종도들에게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종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교육발전과 종도들의 교육기회 제공 등에 어떠한 역할이나 기여도 한 바가 없다." 하였는데, 태고종 종단의 스님과 신도 등이 법인의 이사와 학교의 교수 등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종도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지급하여 종도들을 위한

- 교육기관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④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의 운영주체는 태고종이 아니라 학교법인 동방대학교입니다. "학교운영주체가 태고종이 되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2002. 12. 7. 작성한 약정서 이후, 2004. 9. 17. 학교 설립인가 시,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 공증한 "학교법인 및 대학원대학교 운영에 관한 서약서" 제2항에는 "법인 설립대표자 및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법인운영 및 학교경영에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학교법인과 대학원대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정관과 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법인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한다."고 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과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현행법상 태고종 종단이 학교법인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으며, 법인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및 정관이나 이사회에 우선하여 초법적으로 태고종 종단이 직접 학교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 총무원장과 협의나 논의를 할 사항이 아니며, 태고종 종단의 입장은 태고종에서 추천한 이사들을 통해서 학교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인설립대표자측도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⑤ 이사장은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원장님께서는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운산스님 대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운산스님을 다시 선임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태고종과 약조한 약정서 2항에 의하면, "한국불교 태고종 이운산 총무원장이 추천한 이사3명,